

시론



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동북아학회 이사장

팩스 아메리카나의 명암(明暗)

세계대전 종결 이후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자유진영의 수호자 역할을 자임하며 서방(西方) 세계의 결속을 통해 공산세력의 팽창을 억제해 왔던 미국의 지도력이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상당부분 와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이른바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종말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뇌리에 새겨지게 된 것이다.

물론 지난날에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소말리아 분쟁 등에서 자국의 힘을 절약하기 위해 우방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했던 전례가 없지 않았던 터이다.

그러나 이번 호르무즈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동참 요구에 대해 주요 관련 국가들은 물론이고 영국과 프랑스 등 전통적 우방 국가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제 미국의 유일 패권시대는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정치에서 특정국가의 패권(Hegemony)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당기간 유지됐던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국제사회에서 특정국가의 헤게모니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력 등 월등한 국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국력만이 헤게모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찍이 그람스키(Antonio Gramsci)가 지적했듯이 진정한 헤게모니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등 물리적 강제력과 함께 이념적·문화적 동질감과 함께 타국에 대한 배려 등 도덕적 우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浮上)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이 상당기간 존속될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지금 그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비단 미국의 국력이 한계에 도달한 때문만이 아니라 동맹 국가들과의 신뢰의 손상 등 도덕적 결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2기) 이후 동맹 국가들에 대한 관세 압박과 강압적 군사비 지출 증대 요구는 이른바 대서양동맹(大西洋同盟)으로 불리우는 나토(NATO) 체제의 결속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고,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대안(代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는 중국에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격이 됐다.

중국이 1978년 중공당 제11기3중전회의의 역사적 결의를 통해 개혁·개방의 길에 접어든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채 40년도 안돼 G-2로 등장했고, 적지 않는 국가들이 다음 세대에 미국의 대안으로 꼽을 만큼 발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정말 팩스 아메리카나는 종말을 고하고 팩스 시나(가)(Pax Sinica)가 도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정작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만약 미국이 1960년대 뉴프론티어(New Frontier)를 내세우며 세계와 함께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추구했던 '미국다운'으로 돌아간다면 팩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동에서의 전쟁 여파로 서민들의 삶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보면서 필자의 관심 또한 국제정치의 변화에 집중되고 있음을 어찌하지 못한다.

가공할 공군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전쟁양상은 어느 일방의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개전 초기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폭사시키는 등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방패 삼은 이란의 결사항전 의지에 막혀 교착상태에 빠진 형국이다.

물론 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면 이란의 피해가 미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이지만, 주요시설에 '인간방패'를 내세울 만큼 최악의 피해를 각오하고 담비는 이란을 상대하는 데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으로서도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파키스탄의 중재로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됐으니 '이슬람 문명의 종말'을 거론하며 전쟁의 결과에 대해 호언장담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1945년 제2차

기고



최영수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전남광주특별시의 보건의료, 시장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처해있다. 전국 시군구의 기대수명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단적으로 서울 서초구 주민의 기대수명이 87세인데 비해 해남군 주민의 기대수명은 81세에 불과했다. 전남과 광주의 의료 지역격차도 문제다. 사망률 비교에서 해남 주민의 사망률은 광주 남구 주민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재의 전남, 광주의 의료 현실 속에서 서울시 면적의 2배, 인구 320만에 달하게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까?

이에 필자는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서는 모든 후보들에게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해본다.

첫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전남대병원의 진료 기능을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광주의료원을 조속히 설립해서 현재 전남의 3개의 의료원(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을 단일법인으로 통합하는 지방의료원연합체로 전환하고 신설될 광주의료원이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해 전남의 지방의료원들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진료역량 강화,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남과 광주의 건강격차 해소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전남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 보건정책의 고도화 전략이 필

요하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민건강국처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보건·건강분야 국을 신설하고 지원조직의 통합, 확대를 지원가능도 강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공보건의료 재정 확충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현재 광주시 전체 예산에서 보건의료분야 예산 비중은 1.4%에 불과해 전국 시, 도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공공의료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금 조성 등 예산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5년 기준 연간 광주 950억, 전남 1천300억원에 달하는 담배소비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하고 운영하여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료와 요양, 복지가 분절된 현재 구조로는 급증하는 노인인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확충 등 재택의료의 확대, 노인친화형 주거모델 도입,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로를 닦고 건물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남, 광주 통합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독자투고



따사로운 봄날로 접어들면서 도로 위를 주행하는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해가 저문 뒤 국도나 농로에서 마주치는 농기계는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야간에는 등화장치가 불량하거나 차체가 어두워 식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

생명 지킴이 '농기계 반사지' 부착 필요하다

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손쉽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고회도 반사지 부착'이다.

야간에 반사지를 부착한 농기계는 부착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해,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충분히 감속 시간을 제공한다.

경찰서에서 반사지 부착 및 교통사고 안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농민들은 반사지 한 장이 내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부착에 적극 동참하고, 일반 운전자들은 농촌 도로에서 서행하며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작은 반사지 한 장이 만드는 빛이 농촌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길 기대해 본다. <문기선·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추경 누락 행정통합 초기 비용 특교세 지원이 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최소 행정비용 573억원이 이재명 정부의 2023년 제1차 추경정예예산에서 전액 삭감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무안·전남 동부 등 3개 청사 재배치 189억원, 정보시스템 통합 160억원, 공공시설물 정비 143억원 등이 포함됐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이라면 혼란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물꼬를 터야만 한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한정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사업은 배제했다는 설명이라면 특교세가 당장의 대안일 수 있다. 전남도·광주시가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해 일반·특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한 예비비 투입 방안까지 검토 중이지만 재·재해비를 제외하면 당장엔 수십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부를 활용한 만큼 뼈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난에 시달리는 광주시의 경우 예비비 마련이 사실상 힘든 형편으로 전제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근거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다. 소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시 출발부터 흔들리게 된다. 합당한 국비 지원이 선

행돼야 하는 게 순리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을 터인데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강기정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제경제 악화와 경제위기 대응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최초 통합특별시 출범이 예산 부족으로 위태로워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재정 편성이 필요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통합 준비까지 늦춰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민들은 마음이 착잡하다. 중앙정부와 관계 부처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적극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통합의 성패가 달렸다. 광주와 전남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원 의사를 피력했으나 여전히 미지수로 보인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비용이다. 초기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 사업에 꼭 들어갈 재원이다. 더 늦어지면 큰 일이다.

교육행정통합 맞춰 더 속도내야 할 자치법규 정비

교육행정통합을 앞둔 광주·전남도교육청이 즉시 적용 가능한 기관 운영과 재정 관리·집행 등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우선 통합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각각 318건, 361건의 법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해 단계적 추진 원칙에 따라 일원화하기로 했다. 구제 로드맵도 제시했다.

4월 자치법규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 및 합동 심의, 6월 인수위원회 보고 및 입법안 확정을 거쳐 7월1일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공·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화된 법규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작업이다. 법제업무 담당 부서가 각 기 소관 부서에서 수행해오던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입법절차를 일괄 수행해 신속성을 기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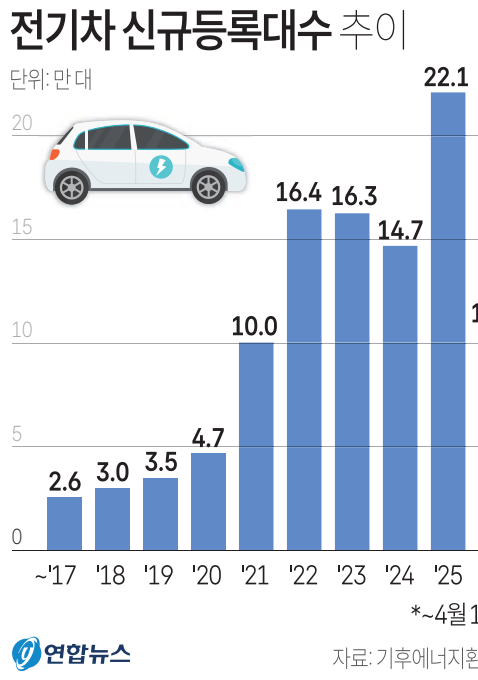
앞서 양 교육청은 교육통합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자 첫 국장 협의

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선 통합에 따른 시행령 입법 대응, 교육재정 특례 및 초기 비용 확보 방안, 학생 지원·돌봄 서비스 공백 방지, 조직·인사·예산·정보시스템 등이 다뤄졌으며, 특히 급·회계·민원·정보체계 등 출범 당일부터 정상 작동이 필수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준비를 강화해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나아가는 대역사다. 당연히 차질이 우려되는 분야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구분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교육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혼란,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차원이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긍정적인 통합 행정망을 만들기 위해 수시 소통하고 긴밀 협력하길 바란다.

긴급부터 잘 해야 한다. 조금의 허점도 없어야 한다. 막중한 사명감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전기차 100만대 시대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15일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17일 기준 누적 등록 대수는 100만4천727대다. 올해 신규 등록 전기차는 14일에 10만대를 넘겼다.

사상 처음 한해 20만대 넘는 전기차 신규 등록된 작년(총 22만919대 등록)에는 7월 둘째 주, 재작년(총 14만6천902대 등록)에는 9월 둘째 주에야 신규 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올해 전기차 등록 대수는 3월까지 8만3천533대였으나 이달 들어서 셋째 주(17일)까지 2만3천406대가 추가로 등록됐다.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전체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3월 말 기준 20.1% (41만5천746대 가운데 8만3천533대)까지 올랐다. 그간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2025년 13.0%, 2024년 8.9%

%, 2023년 9.2%, 2022년 9.7% 등 10% 안팎에 머물러왔다.

기후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다양한 신차 출시와 가격 할인 경쟁, 정부의 보급 정책 등을 전기차 인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 보조금 지급 물량은 추가경정예산을 더해 승용차 28만대, 화물차 4만5천대, 승합차 3천800대가 됐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Phone Number, and Fax Number. Includes sections for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and 광고문의.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